

대외 공개자료

최근 북한 변화동향

2004.12

통 일 부

목 차

1. 개 관

2. 분야별 변화동향

가. 경제분야

나. 사회·문화분야

다. 정치·군사·외교분야

3. 평가 및 전망

1. 개 관

- 북한은 '90년대 들어 사회주의권 붕괴, 자연재해, 김일성 사망 등으로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기 시작
 - 특히 '98.9 공식 출범한 김정일 체제는 군부 중심의 위기관리 통치로 체제 유지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, 심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생존전략 차원의 변화 모색
- '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에는 실리를 내세우면서 부분적·점진적 경제관리개선조치 시행
 - '96년 이후 새로운 분조관리제('96), 독립채산제('97), 헌법개정('98) 및 20여개 경제관련법 제정을 통한 개인경제활동영역 확대, 두차례의 공장·기업소 통폐합('00년 1월·9월), 기업소간 물자교류시장 허용('02.2) 등
- '02년 「7.1조치」를 통해 종전의 부분적 경제관리부문의 개선조치와는 달리 '경제전반에 걸친 개혁'을 실시
 - △물가·임금·환율 등 가격기구 대폭조정을 통한 가격체제 현실화 △기업의 자율권 확대, 인센티브제 도입 등 생산성 제고 조치△배급제 단계적 폐지, 공공요금 인상 등 사회보장 축소 등
- 7.1조치 이후에도 경제관리부문에서의 지속적인 후속 조치 시행
 - '03.3 종합시장 개설, 가격상한 설정 및 제한적 변동가격제 실시, 주민들의 여유자금 동원 및 불가조절을 위해 '03.5 인민생활공채 판매 등
 - ※ 그동안 시장기능 및 공채발행 등은 자본주의적 요소라면서 부정적 시각 견지
 - '03.6부터는 사회주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스스로 그동안 기피해왔던 「개혁」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('03.6, 조선중앙통신·조선신보)
 - ※ “종합시장 창설이 보여주듯이 대담하고 유연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조선의 「경제개혁」의 특징”(‘03.6.16, 조선신보)

○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아직 과도기적인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,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

- 북한은 '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다'는 명분 아래 경제사업에서의 '실리보장'을 중시하는 「실리사회주의」 추진

※ 실리사회주의란 "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는 것"(경제연구, '03년 1호), 실용주의 개혁·개방을 추진하였던 중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'실리사회주의'는 '70년대말~'80년대초 개혁·개방 초기 등소평의 흑묘백묘론(黑描白描論)의 '시장사회주의'와 유사

○ 현단계 북한의 변화는 체제유지를 전제로 개선을 추구하는 수준의 '개혁(reform)' 단계

- 기존 정치이념과 체제의 범위내에서 경제·사회·외교·대남분야를 중심으로 한 실리추구에 중점

○ 이렇게 다양한 방식과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변화를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'결과가 아닌 과정'(진행형)으로 이해할 필요

※ 북한의 공식 이데올로기와 현실 적응을 위한 실제적인 변화를 구분하기 위해 이분법적 평가보다는 단계론적 평가가 적절

2. 분야별 변화동향

가. 경제분야

□ 시장기능의 공식적 활용·강화

- '03.3 김정일의 지시로 시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, 시장을 상업유통의 한 축으로 육성
 - '03.3월부터 평양시(40개)를 비롯, 북한 전역에 대규모 「종합시장」을 300여개 조성 추진
- 매대·점포(일부 개인은 일반상점을 기관·기업소 명의로 차용하여 입차) 증가, 개인서비스업 및 도소매업 등 상업유통부문 활동 활발
-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이 공존하며, 국정가격 결정시 수요·공급, 국제시세, 생산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 - 종합시장에서는 쌀, 기름 등 중요상품에 가격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으나, 사실상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
 - 인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한 가격안정화 조치로 '04.4부터 '식량판매소' 및 '도매반'을 설치·운영
- 광고, 쇼윈도, 간판, 상표권의 중요성 강조 등 상품마케팅에 관심
 - 평양 시내 및 공항·역·고속도로 등에 평화자동차("휘파람") 대형광고판 설치(8개), 평양과 지방에 상품진열창(쇼윈도) 및 상업간판 등장

□ 자율 확대와 실리 중심으로 경제운영방식 전환

- 농촌관리방식의 변화로 농업생산량 증대 도모
 - △토지사용료 및 농자재 사용료 징수 △협동농장의 자율처분권 확대(수확량의 20%→40%) △생산·분배단위를 작업반에서 분조로 전환(100여명→10여명) △현금에 의한 실적분배 확대

- △개인 경작지 허용면적을 30~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 △가족영농제·포전 담당제 시범실시 등 토지임대제의 점진적 확대

○ 공장·기업소의 경영자율권 확대

- 지령성 계획지표의 축소, 지방, 공장·기업소, 농장 등 하부단위의 자율성 강화

※ 공장·기업소에 금액상 목표만 제시, 계획초과생산물 처분 허용, 합의가격에 의한 기업간 물자거래 허용, 자체 구조조정권 부여('04.12.11, 조선신보)

- 지배인에게 20% 범위내에서 인원운영 자율권 부여 및 재료구입 권한 부여

○ 기업의 경영방식과 분배방식을 수익 중심으로 전환

- △재투자, 근로자 복지, 성과급 등에 사용되는 기업이익 유보분의 확대, △계획외 생산·판매 허용 등

○ 생산부문 개혁을 위한 여건 조성 추진

- △회계법 제정('03.3) △전면적인 기업재무조사 △기업소 지배인의 30~40대로 세대교체 △산업현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 인정 등

○ 경제난으로 부족해진 재정의 확충을 위해 공채판매 및 초보적인 세금 징수 실시

- 주민들의 여유화폐자금 동원 및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공채판매('03.5-11)
- △종합시장 판매자로부터 국가납부금(판매수익의 25%: 일종의 소득세) 및 시장사용료(상품종류에 따라 하루 50~300원) 징수, △국가건물 임차 개인사업자로부터 국가납부금 징수, △텃밭 등 계획외 농지에서 세금 징수

○ 기업운영자금을 재정이 아닌 은행대출로 조달하기 위한 재정·금융부문 개혁을 준비

- 조선중앙은행 관계자 중국 4대국영은행 금융연수('02.8), 사회과학원 관계자 중국 금융연수('03.8), 베트남 국제금융연수('04.5) 등 실시

□ 대외 경제개방 추진 및 외화획득 노력

- 외자유치를 위해 「경제특구」 지정 및 대외개방 확대 모색
 - 금강산관광지구('02.10), 개성공업지구('02.11) 등 경제특구 지정 및 남포 등 연해도시 개방 움직임
 - 경제특구와 관련된 하위규정 제정·발표, 4대 경제협합의서 발효 등 경제협약의 제도적 기반 마련
 - 평양 국제비즈니스 단지 건립, 평양 제일백화점 임대 추진 등 중국과의 경제협약 확대
 - 기 지정된 나선특구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경제협력합의서 체결('04.1), 나선지역에 관세면세지역 제공 협의('04.10)
- 해외 시장경제연수,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해 적극적 개방 준비
 - 중국·베트남·호주·동남아·유럽 등에 경제대표단 파견 및 시장경제 연수 지속 확대 실시
 - 합영·합작 외 단독기업설립 허용, 최저임금 인하(30유로), 전기세·물세 등 각종 사용료 및 세금 인하로 외국인 기업 투자여건 개선
-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해 「외화교환소」 설치 및 무역확대 도모
 -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화교환소를 설치, 시장환율 수준에서 외화교환 실시
 - 개별 공장·기업소와 시·군 단위의 무역을 허용하고, 외화벌이 기업의 외화 자체활용 비율을 20%에서 40%로 확대
 - ※ 공장·기업소에 수출물량의 3배까지 수입물량을 늘릴 수 있는 권한 부여
- 개성공단·금강산 특구 및 외국인회사에게 북한노동자와 개별 근로계약 체결 및 직접 임금(외화) 지불 허용

□ IT·이동통신사업 육성 및 응용기술 중시

- 김정일의 중국 방문('00년·'01년)을 계기로 IT산업 육성 강화
 - 인공지능 세계컴퓨터바둑대회 우승('04.10.28, 중방), 문자인식·언어인식 프로그램('04.10.12, 조선신보) 등 640여건 개발등 H/W보다 S/W 개발에 주력, 수출로 외화조달
 - ※ 최근 1년간 평양에 첨단기술봉사소(공장의 HM, SW 기술지원 등) 및 6~7개의 PC방을 개설하여 성황리 운영('04.11.17, 후룡강신문)

나. 사회·문화분야

□ 자본주의적 사고 확산

- 실리 중시의 사회분위기로 주민들의 시장친화적 마인드 형성
 - 주민들이 '돈의 가치'를 인식, '에누리', '깎아주다', '떨이'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상거래 흥정
 - 상업 광고판 설치, 자본주의식 혁신 구호의 공장내부 전시, 식당 상호를 적은 라이터 선물, 상점 점원들의 호객행위
 - 임금 상한폐지·차등지급 등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화폐중시 가치관이 심화되고, 근무태도가 능동적·적극적으로 변화
 - ※ 봉사직종(식당, 카페, 가라오케, 당구장 등)에서는 고객만 있으면 영업시간을 새벽까지 연장(평양체육관 앞 불고기식당은 24시간 영업)
 - 개인 상업활동·사채업·주택매매 등 상거래 성행
 - 당구·볼링·컴퓨터게임·햄버거(고기접빵) 등 외래문화 유행
 - ※ 김일성종합대 등 평양 시내 각 대학에서 햄버거 공급('03.12.6, 노동신문), 평양체육관 앞 24시간 햄버거가게에서 세트메뉴 판매('03.10.19, 조선신보)
 - 주민들은 중앙배급제가 중단 또는 축소되자 생필품을 시장구매 등을 통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변화된 현실에 점차 적응

□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 및 사회유동성 증가

○ 자영업 성행으로 새로운 사회계층 등장

- 국가 건물을 기관·기업소 명의로 임대해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·상점이 증가하고 직업, 배우자, 대학·학과 선택도 경제적 능력 중시

○ '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계기로 인구이동이 활발해졌으며, 최근에는 장마당 등 시장 활성화로 인구유동성이 더욱 증가

○ 대외개방, 물자 및 인구 이동 증가 등으로 외부 접촉 및 정보 유입 확대

□ 빈부격차, 부정부패 등 사회문제 발생

- 장사꾼 등 신흥부유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반면,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공장의 근로자들은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가 악화되는 등 빈부격차 발생

- 배금주의 팽배로 뇌물수수·절도사건 등 부정부패·범죄와 같은 일탈행위 증가

□ 사상교양 강화 및 주민불만 해소방지 시책 병행

- 개인주의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해 주민통제 및 사상교육 강화

- '03년 개성·해주·원산·사리원·신의주, '04년 청진·강계 등 주요 접경도시에 '계급교양관'을 설치, 주민집단교육을 실시(연2회이상)

- 개인주의를 사악한 것으로 매도하고 전쟁영웅을 이상형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적 사상 교양 강화

※ “인간의 넘과 육체를 배앗고 사회에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는 독소인 미신과 황금민능주의, 부르조이 생활양식을 유포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서는 안됨”(’04.8.5, 평방)

- 사회주의 경제질서와 집단주의문화 유지를 위한 형법규정을 대폭 신설·개정(’04.4)

- 사유재산침해처벌강화, 상품판매·가격질서위반죄, 탈세죄, 외화관리 질서위반, 불법주택 거래죄 등 경제관리질서 처벌조문을 기존 18개조에서 74개조로 확대
- 퇴폐적인 문화반입 및 행위, 허위날조 유포, 매음 등 자본주의 병리 현상 유입차단과 비사회주의적 요소에 대한 처벌 강화(16개조에서 46개조로 확대)
- 주민들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한 대체식량공급 및 24시간 편의점·생맥주·대중식당 운영확대
 - ※ 평양엔 생맥주집 150개, 대중식당 350개가 성업중이며 지난 4월 대동강구역 문수거리에 24시간 편의점 및 식당 개업('04.4-5 조국5월호, 러시아소리방송)
-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 생활을 장려하면서 인민 취향의 대중적 문화 확산
 - 함남 흥남시에 종합편의시설 「천기원」(연건평 수천㎡)을 개원('04.4) 하고 목욕탕·식당·오락실 등을 운영, 평양시 지하철 광복역 인근에 북한이 자체개발한 PC방(PC100대) 개설('04.4)

다. 정치·군사·외교분야

□ 실리사회주의 강조

-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'실리사회주의' 이론화 시도
 - 실리사회주의를 "사회주의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시행하는 것"으로 정의(『경제연구』, '03년 1호)
 - 김정일의 실리중시 교시 때문에 자기분야 최고가 되면 그만큼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 형성
 - 미래지향적인 '경제강국 건설', 정보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중점 육성 등 이념적 구호보다 각 분야에서 실리 강조

□ 세대교체 및 실무 중심의 테크노크라트 중용

- 당 정치국·비서국 등 권력핵심 인물의 큰 변화는 없으나, 국방위원회의 경우, 혁명1세대를 신진인물로 교체(백세봉)
 - 제11기 제1차회의('03.9)에서 혁명 1세대인 고령 및 지병인물 퇴진
 - ※ 이을설(83), 백학림(86), 김철만(86), 최영림(75, 지병) 등
-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차회의시 내각의 경제관리 권한을 강화하면서 실무중심의 테크노크라트 중용
 - 당 및 내각에서 40-50대, 전문성·사고 유연성·실무경험을 겸비한 젊은 인물들을 주요 직위에 등용
 - 주요 회담대표단을 남북회담 3세대로 교체(권호용, 전종수, 김만길 등)
 - 최근 교체된 인민군 군단장들 대부분은 40-50대, 사단·여단장들도 30-40대로 대폭 교체

□ 교류협력 및 경제건설에서 군부의 지원 증가

- 남북교류협력 관련, 군부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
 - ※ 제2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(6.3-4)에서 채택한 서해해상 우발충돌 방지와 분계선 지역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관련 합의를 "6.15 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데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놓은 것"으로 평가('04.6.13, 중방)
- 철도·도로 연결 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 지원을 위한 「군사적 보장 합의서」 채택 및 군 당국자간 실질적 협력 증대
 - ※ "우리 군대는 6.15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, 쌍방 군부가 보증합의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경제협력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망이 열렸음"('03.9.18, 중방)
- 경제건설에서도 군의 역할을 강조, 주요 경제건설 사업에 군을 대대적으로 동원

□ 실리추구를 위한 외교의 다변화

- 김정일이 중·러·일 등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대외 폐쇄 이미지 완화
 - 김일성 사망('94.7) 이후 은둔상태에서 「남북정상회담」을 계기로 중·러국가 등 13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
 - 정상외교 대상국이 중·러 뿐만 아니라 일·EU·아시아 지역국가 등으로 확대
- '98-'99년간에는 2개국에 불과하던 서방권과의 수교가 '00년 이후 EU 등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21개국으로 확대
 - EU 25개 회원국중 23개국과 관계 정상화(프랑스·에스토니아 제외),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개설('03.4),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 재개설('04.5) 등
- 국제사회 참여로 부정적 이미지 불식 노력
 - 국제결제은행 연차총회(김완수 중앙은행 총재, 6.26-28), 아세안지역 안보포럼(백남순 외무상, 7.1-2), 제59차 UN총회(최수헌 외무부상, 9.27-10.5) 참가
- '80년대 이후 둔화된 비동맹국가와의 우호증진 노력 재개
 - 김영남 제13차 비동맹회의 참석('03.2), 양형섭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4개국 순방('04.2), 김영일 몽골 등 아시아 5개국 순방('04.7), 김영춘 쿠바 방문('04.11) 등

3. 평가 및 전망

-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·사회문화 분야를 중심으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, 실리·실력·실적(三實主義)이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으로 평가
 - 경제적으로 부족한 물자 공급·유통 확대를 위한 시장기능 강화, 인센티브제 등 시장경제적 요소가 도입·확산되고 있는 단계
 - 사회문화적으로 주민들 사이에 실용주의적 가치관과 시장경제 마인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
- 정치·사상적 측면에서는 당·정간부의 세대교체 추진 및 실무 중심의 경제분야 인사기용, 실리사회주의 개념 도입 등 체제내적·미시적 변화 움직임
 - 다만, 우리식 사회주의·선군정치를 내세우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는 한편, 정치적 민주화·다원화, 이데올로기 등 본질적(fundamental) 변화 징후는 미약
- 현재 북한의 변화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, 3단계 변화의 틀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「상징적(symbolic) 변화」 단계를 넘어 「의미있는(significant) 변화」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
 - 물가상승, 재정적자 증가, 사상해이 등 문제점 때문에 개혁·개방의 수위(속도와 범위)를 일시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은 있으나, 변화의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
 - ※ 중국·베트남의 경우, 물가상승 및 부정부패 확산 등으로 개혁과정이 일시 후퇴하였으나 각각 남순강화('92년), 도이모이('86년)를 통해 개혁 본격화
- 따라서, 북한의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양적·질적으로 확대·심화되고 제도화 과정을 겪으면서, 변화의 不可逆의 특성에 따라 궁극적으로 전 분야의 「근본적인(fundamental) 변화」로 진전될 것으로 전망 <<끝>>